

대교협 “혁신법, 학문 다양성 훼손·대학 연구자율성 위축”

혁신법, 연구개발 관리규정 간소화 대교협, 전면 재검토 요구 입장문 “성격 다른 사업 포함, 현장에 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협 회장단 소속 대학 총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낯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대교협 회장단은 “혁신법의 도입 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대학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는 150여 개에 달하던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

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해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혁신법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무리하게 법을 시행했다”며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인력양성 사업에 R&D 사업에 적용되는 혁신법을 적용한 것이 무리고, 더욱이 과거부는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협의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대학 총장들의 요구다.

회장단은 “연구목적·내용·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사업 관리 규정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문을 획일화하는 등 대학 연구현장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문사회분야

학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분야를 과학기술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혁신법이 국가R&D 관리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제정됐음에도, 과거부는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세한 간막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간접비의 학교회계 전출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그 전출 내역을 과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를 위축시키는 행·재정장 규제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다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노조 “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환” 촉구

부실대학 낙인 방지 조치 요구 “평가 대상 대학에 재정 지원하라”

대학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로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을 포함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전국대학노조)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최소 수준 이상 재정지원하고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평가에 종속된 대학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대학을 살릴 수 없다”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대학노조는 지난달 27일 일반재정지원 제외 16개 대학의 교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 정책의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에는 관련 요구서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노조는 “이미 평가 가결과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우려가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 단 순히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부실대학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토론했다.

이 대학들은 당장 있을 대학입시에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입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준립의 위기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 대학평가가 부실대학과 비부실대학으로 대학을 불평등하게 등급화·서열화해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다양한 대학 특성을 무시한 평가 기준이 대

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는 정반대로 편입률적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평가 탈락 예정대학 중에는 상지대와 평택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등 지난 7월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4개 대학도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론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의 일반재정지원 평가대상 전체 대학에 대해 기본 재정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결과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도록 재정지원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학노조는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에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 ▲재정지원사업비 운영경비로 활용 방안 ▲현 대학평가 정책 폐기 및 고등교육정책 전면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교정시설 수감 고액채납자 영치금 압류

#. 채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500만 원을 안 내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 2000만 원에 사들였다. 세금납부를 미뤘던 채납자는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채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채납자는 구급대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채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을 압류한다고 지난달 말 통지했다. 이들이 채납한 세금은 417억 원에 이른다 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영치금은 즉시 채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는 납세자가 채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채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기관이 납세자가 채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채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같은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5년 뒤 징수권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ik1@

덕성여대 약학대학 약대 최초 ‘OSCE 프로그램’

올해 3년차 시행

덕성여자대학교는 약학대학이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지난달 24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OSCE는 미국의 Pharm.D. 교육과정에서 약학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핵심역량과 전문기술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으로 관련 모든 평가도구가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임상실기시험으로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류완지(5학년) 학생은 “다양한 약학 지식과 약물치료학 지식을 통합해서 공부해야



덕성여대 약학대학이 ‘OSCE’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지난달 24일 실시했다. /덕성여대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과 팀 학습으로 준비한 후에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환자 복약지도도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수도권 大 중 장학금 최다

삼육대학교가 지난해 수도권 대학 중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연속 1위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삼육대의 2020년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395만 3894원이다. 재학생 3000명 이상 수도권 일반대학(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포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333.5만원보다 약 62만원, 수도권 대학 평균 331만원보다 64만원가량 많다.

/이현진 기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화

서울시, 인프라 구축 사업

서울시는 중랑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수변문화공원을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동부간선도로 3~4차로 1.35km 구간이 지하차도로 바뀐다. 차도가 사라진 상부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의 수변문화공원이 생긴다. 녹지는 서울광장 1.5배 인 약 2만㎡ 규모로 들어선다.

수변문화공원과 중랑천 건너편을 잇는 2개 교량도 신설된다.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 (2025년), ‘서울로봇인공

지능과학관’ (2023년), ‘서울사진미술관’ (2023년) 등 문화·예술산업 거점을 보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2개 연결교량은 2024년 12월 우선 개통하고, 수변문화공원은 2025년 6월까지 완공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조성될 서울아레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핵심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1953억 원이 투입된다.

/김현정 기자